

# 연평해전의 전술적, 전략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



國 防 大 學 院

中 領 金 泰 俊\*

## ◇ 目 次 ◇

- I. 서 론
  - II. 연평해전에 대한 개관
    - 1. 북방한계선(NLL)이란?
    - 2. 연평해전의 경과
    - 3. 연평해전의 결과
  - III. 연평해전의 전술적 평가
    - 1. 연평해전과 전술의 관계
    - 2. 연평해전의 전술적 내용
    - 3. 연평해전의 전술적 내용분석
    - 4. 연평해전의 전술적 평가
  - IV. 연평해전의 전략적 평가
    - 1. 연평해전과 전략의 관계
    - 2. 연평해전의 전략적 내용
    - 3. 연평해전의 전략적 내용분석
    - 4. 연평해전의 전략적 평가
  - V. 연평해전의 정치적 평가
    - 1. 연평해전과 정치의 관계
    - 2. 연평해전의 정치적 내용
    - 3. 연평해전의 정치적 평가
  - VI. 결 론
- ※ 참고문헌

비록 국가가 강대하다 할지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태평하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태롭다. - 사마천 -

\* 해군사관학교 및 국방대학원 졸업(안전보장학 석사), 미국 웨인주립대 졸업(국제정치학 박사), 전발단 전력발전처 해양전략담당, 초계함 함장, 해본 전략기획처 목표기획담당, 미래연구단 연구원, 국방대학원 군사전략학 교수(現)

# I. 서론

## 1. 시작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국가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의 요인들이 있으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국제분쟁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분쟁해결의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을 인식하고 있는 한 전쟁발발의 개연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홉스(Hobbes)는 전쟁과 평화의 구분을 氣象에 비유했다. 즉, “不順한 日氣라는 것은 한두 번의 소나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까지 여러 날을 통해서 본 傾向을 말하는 것과 같이 전쟁의 성질은 실제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평상시 그때까지의 공개된 配備에 있다.”고 했다. 이는 마치 기상이 좋고 나쁘다는 상태를 여러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兩國家門의 관계도 존중, 우호, 긴장, 불화, 적대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은 어떤 관계일까? 연평해전이 발생한 이후에도 금강산관광이 계속되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교류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남북관계가 평온한 것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서해해상에는 실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남·북한의 관계는 결코 서로를 존중하는 우호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러한 이유는 연평해전 이후인 1999년 9월 2일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한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서해 5도를 포함하여 NLL 훨씬 이남까지 북한의 영해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 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김정일이 내린 “연평해전의 패배를 만회하라.”는 지시

와 지난 3월 23일 북한 해군사령부가 백령도 등 서해 5도 인근 수역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5도 통항질서'로 인하여 여전히 서해에는 긴장의 파고가 높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 한반도와 같이 첨예한 군사적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생존을 위한 국가안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얼마나 될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해해야 되며,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거의 1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연평해전을 얼마나 연구했으며, 연평해전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를 했는가?

우리는 연평해전 승리의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연평해전에 대한 평가작업과 함께 연평해전으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우리의 영해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 줄 한반도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연평해전의 정의와 성격에 대한 연구』<sup>1)</sup>를 하면서 연평해전에 대한 정의와 성격에 대하여 '북한은 무력인 해군력을 사용하여 NLL에 대한 침범과 선제공격이라는 침략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NLL을 사수하고 주권수호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 "밀어내기식 충돌기동"과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이란 자위적 방어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법적인 침략전쟁을 시도한 반면에 한국은 주권수호라는 합법적인 자위의 전쟁을 수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연평해전이 한반도에서 한산대첩 이후 최대의 전과를 올린

---

1) 연평해전의 정의와 성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필자의 줄고, "연평해전의 정의와 성격에 대한 연구", 『해양전략』 제104호('99년 9월), pp. 13 ~ 30 참조할 것.

해전이라고 평가한다.<sup>2)</sup> 그러나 전투에서 아무리 훌륭한 전과를 올리고 영웅적인 인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정당한 평가가 없다면 역사라는 거대한 쓰레기더미에 파묻히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군의 훌륭하고 귀중한 보물이 길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깨끗이 닦아서 역사라는 전시장에 올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과거에 단순히 일어났던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평가함으로써 역사적인 사실로서 자리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해군의 빛나는 전통을 수립한 이순신 제독의 한산대첩에 이은 연평해전을 여러 각도에서 냉철한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통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우리 해군이 21세기에도 강력한 해양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주도적인 위치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해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 2.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연평해전 승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평해전이 갖는 의미를 여러 가지 측면, 즉 전술적, 전략적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연평해전의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려고 한다. 연평해전의 승리는 해군의 승리라는 차원을 넘어 남북대치기의 국가안보는 물론 나아가 해양의 시대라고 일컫는 21세기 통일한국의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연구를 위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

2)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연평해전을 전술적, 전략적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 및 평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첫째, 연평해전의 전술적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둘째, 연평해전의 전략적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셋째, 연평해전의 정치적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 3. 연구범위 및 방법

북한의 경비정들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은 1999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약 9일간이며 실제 연평해전이 발생한 일시는 6월 15일 09:28~09:42까지 14분간이다. 전술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적 범위는 전장에서 실제 행해진 전투행위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 이전의 기동과 직접 교전시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실제교전 이전과 이후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전략적 및 정치적 의미에서의 시간적인 범위는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로 한정한다. 분석을 위한 연구의 내용범위는 전술적, 전략적 그리고 정치적 범위를 다루며 연구방법은 언론보도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필요할 시에는 필자의 직관에 의한 추론을 사용한다.

## Ⅱ. 연평해전에 대한 개관

### 1.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이란?

#### 가. 한국이 서해 5도를 관할하게 된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지어 가고 있던 미국이 한반도의 분할을 구상하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1945년 8월을 전후해 미국의 국무부·정보기관 그리고 태평양사령부가 한반도 분할에 관한 각자의 계획과 지도를 그리고 있을 때 유독 국방부 작전국(OPD)은 서해 5도를 주목해 서쪽 끝은 북위 38도 10분(장산곶)에서 시작해 동쪽으로는 북위 37도 40분(주문진)에 이르는 西高南低의 사선을 분할선으로 그렸다. 그들이 옹진반도를 중요시

한 것은 바로 이 서해 5도 때문이다.

당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마한의 논리에 따라 ‘육지는 잃는 한이 있어도 바다(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 방위전략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장이었다.<sup>3)</sup> 당시 휴전선은 육지에만 확정되었을 뿐 해상에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서해 5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도서들에 대해 유엔측과 공산측 사이에 엄청난 시각 차이가 있었다. 즉, 미국은 마한의 전략에 따라 서해 5도를 장악하면 향후에 일어난 군사분쟁에서 우위를 장악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북한의 대남전략은 남한의 빨치산과 이를 지원하는 지상군 개념에 몰두하고 있었다.

당시 유엔군측 수석대표는 극동군사령부 함대사령관이었던 터너 조이(Turner Joy) 제독으로 철저한 마한주의자였다. 그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서해 5도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후에 해리슨 중장과 교체되었지만 이 정신은 그대로 승계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간파하지 못한 북한측은 서해 5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유엔군측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최종 협정서에는 휴전선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별도 조항에서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의 북방 및 서방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군사 지휘하에 둔다.’고 규정해 놓고서도 그 단서에 ‘단,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다.<sup>4)</sup>

---

3) 휴전교섭을 위한 본 회의의 첫모임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열렸다. UN측 대표는 터너 조이(Turner Joy) 해군제독을 수석대표로, 한국의 백선엽 장군과 UN측의 Hodes, Cragie, Burke 장군을 포함하는 5명, 공산측에서는 남일을 수석대표로, 북한의 이상조, 장평산, 중공의 등화, 팽창우를 포함 5명으로 구성되었다.

4) 보다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줄고, “연평해전의 정의와 성격에 대한 연구”, 『해양전략』 제104호(‘99년 9월)의 부록, pp. 34~36, 혹은 한국 휴전협정 제2조 13항의 B를 참조할 것.

## 나. NLL 설정 배경

1953년 휴전협정 규정상 육지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은 휴전 당시의 군사접촉선(Line of Contact)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해상은 그 당시 UN군사령부측이 거의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선을 기준으로 삼기 곤란하였다. 또한 육지에서 어느 정도의 폭까지를 관할수역으로 하고 나머지를 공해로 하느냐도 의견이 달랐다. UN군사령부측은 당시 해양법상 영해폭인 3해리를 주장한데 비하여 공산군측은 12해리를 주장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군측은 육지의 분계선을 중심으로 상대방 후방에 해당하는 도서나 수역에서 무조건 철수할 것을 주장하고 UN군측은 일방적으로 보상없이 물러날 수는 없으니 육지의 분계선을 조정하자고 했다. 결국 휴전협정의 다른 교섭대상에서 약간의 양보를 받고 UN군측이 완전양보, 이른바 5개 도서군을 제외한 북한 관할지역의 모든 연안 섬들을 내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1953년 휴전협정 제2조 13항 B의 규정이다.<sup>5)</sup>

이와 같이 1953년 휴전협정에는 인접해양상에서 양측의 관할권을 구획하는 분계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UN군사령부측은 1953년 8월 서해 5개 도서군으로부터 북쪽으로 3해리 되며 동시에 서해 5개 도서군과 북한 점령지 사이에 대략 중간선이 되는 선을 설정하여 북방한계선이라 하고 그 이상은 한국측의 순찰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sup>6)</sup>

북한은 NLL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이 NLL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12해리 영해가 국제적으로 일반

---

5) 유병화, 「동북아지역과 해양법」(서울 : 진성사, 1991), p. 241.

6)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서해 5도의 법적 지위, 1988. 7. 15. p. 3, 유병화, 전  
게서, p. 242에서 재인용.

화되는 추세가 시작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sup>7)</sup> 그 이유는 북한의 물과 섬에서 12해리선을 그으면 NLL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측의 연평도, 백령도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해 12해리선을 그어야 하므로 중간선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문제가 되는 곳은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중간 수역 뿐이다.

북한은 1973년 12월 1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서해의 경계선에 대한 최초의 이의를 제기하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묵종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관할구역으로 보아야 한다.<sup>8)</sup> 그러나 북한은 1973년부터 NLL에 대한 ‘문제제기’<sup>9)</sup>를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북한의 함선들을 NLL 남쪽으로 남하시켜 긴장국면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

7) 참고로 북한은 1977년 6월 21일 200해리 경제수역을 결정하여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같은 날 ‘군사경계선 설정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동해에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마일,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까지를 군사경계선으로 하고 군사경계선 구역 안에서 외국인, 외국군용 함선, 외국군용 비행기들의 행동을 금지하며, 민용 선박과 비행기(어로선박 제외)들은 사전 합의 혹은 승인 하에서만 군사경계선 구역을 항행 및 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런 관할 수역을 선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영해 기준선이나 기준점, 외측한계선의 좌표나 지도를 공표하지 않아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병화, 전게서, p. 246 및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서해 5도의 법적 지위 참조

8) 합의나 협정은 동시에 두 당사자가 만나서 의사합의를 이루는 경우 뿐 아니라 한쪽 당사자가 제의한 것을 다른 당사자가 나중에 승낙하거나 이의없이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예를 들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0조 5항(Paragraph 5, Article 20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에 의하면 조약의 유보와 관련, 상대방이 유보의 통보를 받은 지 12개월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북한은 휴전협정 제2조 13항의 B에 서해 5도가 북한군 통제하에의 해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 5개 섬 출입시는 사전 임검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측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UN군측은 그 주변 수역이 한국의 관할수역이며 지난 20년간 관할하여 왔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은 서해 5도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북한에 사전 임검을 받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 해군함정의 호송작전으로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시켰다. 구체적 내용은 이기택,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환경과 해양에서의 안보” 「Strategy 21」, 창간호(1998), pp. 268~269 참조.

11월 28일부터 1975년 2월 26일까지 소위 「서해사태」로 지칭되는 남·북한 해군간의 대치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75년 2월 26일에는 소청도 서남방 40km 해점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서울함 3,000톤급)이 북한 어뢰지도선(1,500톤급)을 함수로 충돌하여 침몰시킴으로써 「서해사태」가 종료된 적도 있었다. 그 이후로 북한 해군은 NLL 이북에서만 활동을 해왔으며 간혹 북한측이 NLL을 침범했을 때도 우리측이 경고를 하면 즉시 후퇴했기 때문에 북한은 실질적으로 NLL을 인정하고 준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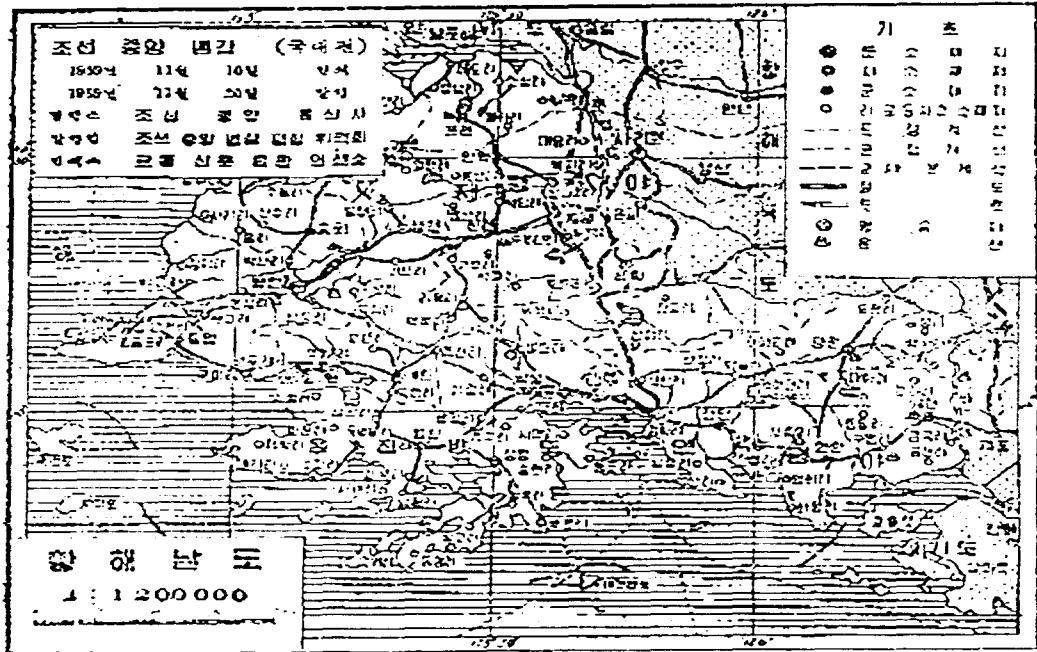
그리고 북한이 NLL을 인지하고 준수했다는 단적인 증거는 1959년에 조선중앙통신사가 발행한 『조선중앙연감』에서 북한 스스로가 현재의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0)</sup> (북한이 계속해서 NLL을 인정하고 준수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보면, 1984년 수재 구호물자 제공 당시에는 북한측이 NLL상에서 우리측에 배를 인계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1991년에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당시 해양에서 NLL을 기준으로 NLL 남쪽은 남한이, 북쪽은 북한이 관할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로 간주할 수 있다.

#### 다. NLL 설정에 대한 평가

사실 1953년 7월 27일 한국휴전협정은 해양경계선에 관해서는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53년 휴전협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양경계선이 필요했다. 그러나 NLL 설정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거나 전혀 근거없는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해양경계선을 획정함으로써 휴전협정규정의 불분명한 부분을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육지나 섬의 인근 수역은 그 육지나 섬에 속한 것으로 존중하

---

10) 한국일보, 1999년 10월 1일 1면.



〈그림 1〉 조선중앙연감(1959년 조선중앙 통신사)

라는 것이 1953년 휴전협정의 정신이었다고 한다면 NLL은 이러한 규정을 구체화한 경계선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UN군사령부측이 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고 해도 서해 5개 도서군과 응진반도의 대체적인 중간선을 택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하고 북한측에 이를 통보하여 〈그림 1〉과 같이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에도 NLL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 해양경계선 획정에 관한 국제관행을 준수하였다.

반면에 당시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 수해물자 제공시에 북한은 NLL상에서 우리에게 배를 인계했다는 점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명시한 것처럼 북한의 공식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북한의 NLL에 대한 공식인정 사실이다. 더구나 남·북한과 관계 당사자들이 20년간 NLL을 남·북한 양국 군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분계선으로 간주하여 준수한 것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관습법을 형성하기에도 충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20년이 지난 1973년에 북한이 NLL을 부인하고 한국의 관할수역에 대하여 북한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억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라. NLL에 대한 우리의 입장

앞으로 북한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부속합 의서를 들어, 북방한계선이 영해 3해리 때 그어진 것이고 그후에 12해리 영해를 선포하였으므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다른 중간선 원칙에 따라 북방한계선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측은 남북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해상에 있어서 남·북한의 관할구역은 어디까지나 휴전 이후 46년간 유지되어온 북방한계선에 따르는 길밖에 없으며 설사 이 문제가 나중에 ‘협의대상’이 된다고 해도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중간선 이외의 별도의 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sup>11)</sup> 사실 휴전 이후에 NLL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간의 굳어진 관행을 기초로 역사적 권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휴전협정을 대신할 조약이 없는 한 휴전협정이 국제법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영해 논쟁은 자칫 NLL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분쟁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논쟁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40년 이상 NLL이 사실상 존재해 왔으며 바다에서의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군사적인 분계선으로서 준수되어 왔다. 따라서 NLL은 앞으로도

---

11) 이상일, “서해교전이 남긴 법적 문제”, 조선일보, 1999년 6월 21일자.

12) 이기택,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환경과 해양에서의 안보”, 『Strategy 21』 창간호, 1998, p. 270, 강영훈 교수도 월간조선 1999년 7월호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유효하며, 결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사수해야 할 유일한 선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1999년 9월 2일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한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의 일방적 선포, 김정일의 "1년 이내 연평해전 패배를 만회하라."는 지시 그리고 2000년 3월 23일 북한 해군사령부가 백령도 등 서해 5도 인근 수역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5도 통항질서' 등으로 인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어떠한 북한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사수해야 될 것이다.

국가간의 갈등과 마찰이 있을 때는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외교적인 협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인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실상이었다. 사실 국가간이나 민족간에 국경이나 영토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를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러한 문제로 많은 전쟁이 발생했다. 전쟁은 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일종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해당한다. 즉, 승자는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반면에 패자는 거의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는 전쟁시 배상금까지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다. 우리는 NLL을 고수하기 위해 휴전 이후 최대규모의 전투를 통해 힘으로 북한의 의지인 NLL 무실화를 제압하고 우리의 의지인 NLL 사수를 관철시켰다. 이로써 북한의 NLL 무실화 시도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NLL에 대한 현상유지가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협과 도발을 시도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NLL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2. 연평해전의 경과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 동안 연평도 근해 해상으로 북한 경비정들이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고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및 철수를 반복함으로써 연평도 근해에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위기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북한 경비함정이 NLL을 침범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자 우리 해군은 고속정을 긴급 출동시켰으며, 경고방송을 통해 북한 경비정들에게 NLL 이북으로 퇴각해 줄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퇴거요구를 무시하며 NLL에 대한 장시간 무력시위를 벌이다 자정 무렵쯤 철수를 했다가는 그 다음날 다시 침범을 반복했다. 이처럼 6월 7일 이후 계속적으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국방부와 해군은 국회 국방위의 질책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sup>13)</sup> 그러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북방한계선을 지상의 분계선과 같이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에 군은 다음날부터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등 대형 함정을 연평도 인근해역에 증강 배치했다.<sup>14)</sup>

북한의 NLL 침범으로 한국내의 대응분위기가 강경한데도 북한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NLL을 침범해왔다. 이에 우리 고속정들은 북한 경비정들의 침범을 저지하기 위해 경고방송과 앞을 가로막는 시위기동 등을 이용하여 퇴각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우리 고속정들이 상대적으로 소형이라는

---

13) 국회 국방위에서 의원들은 조성태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을 놓고, 안보와 어업 두 가지 측면에서 따졌다. 또한 어느 기자는 NLL 침범에 대해 “영해침범”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답변이 “우리 땅이라는 뜻에선 영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선 다소 애매합니다.”라고 한 것과 “영해침범”이라는 용어 대신 ‘越線’, ‘북한의 도발’ 대신 ‘북한의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나아가 “북한에서는 월선하는 선박을 경비정들이 앞장서서 지켜주는데 우리는 이 지경이니(북한 경비정의 남하로 들어 금지된 상태) 이렇다 우리 어장 다 뺏겨도 아무 말 못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우리 어민들의 하소연 등을 들면서 ‘물러터진 국방부’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다. 보다 구체적인 국방위의 질책은 조선일보, 1999년 6월 12일자 참조.

14) 김용삼, “서해해전”, 『월간조선』, 1999년 7월호, p. 670.

약점을 이용하여 저돌적인 충돌공격을 시도했다.<sup>15)</sup> 이러한 와중 속에서 우리 고속정들도 충돌공격에 맞대응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한국 해군의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 해군은 우수한 기동력을 이용하여 적의 취약부위인 함미에 충돌을 감행함으로써 북한 경비정을 북쪽으로 퇴각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북한은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선제공격이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 3. 연평해전의 결과

우수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 해군의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으로 인하여 상황이 불리해지자 1999년 6월 15일 9시 28분 북한 경비정에서 25mm 기관포로 우리 고속정을 향해 먼저 사격을 감행했다. 북한의 선제공격을 당하자 우리 해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약 14분간에 걸쳐서 남·북한 해군이 해상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해상전투인 연평해전을 벌이게 되었다.

연평해전에서 나타난 전투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측은 어뢰정 1척 침몰, 5척 파손, 많은 인명피해(30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100여 명 정도의 사상자)를 입고 NLL 북쪽으로 도주하였으며 우리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 9명의 장병이 경상을 입었다.<sup>16)</sup> 이러한 연평해전의 결과는 남·북한은 물론 이를 지켜본 전세계를 놀라게 한 대전과였다.

---

15) 북한 경비정은 대청급이 약 400톤, SO-1급이 약 250톤으로서 우리 고속정 150톤급보다는 충돌공격을 감행시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큰 덩치를 이용하여 저돌적인 충돌공격을 시도했다. 이러한 북한의 충돌공격으로 인하여 우리 고속정 328호정은 6월 9일 06:30경 선체에 상당히 큰 손상을 입고 인천항으로 수리를 위해 입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6) 조선일보, 1999년 6월 17일자, 6면.

### Ⅲ. 연평해전의 전술적 평가

전략과 전술은 무엇이라고 단정지어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는 전략, 전술에 대한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로진스킨(Rosinskin) 박사는 “과거 150년간 전략과 전술에 대한 만족스럽고 명백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전략과 전술에 대한 정의가 분석적이기 보다는 語義的이었기 때문에 많은 장애를 받아 왔다. 그러한 사정은 군사사상에 대한 독일, 러시아학과와 그것과 반대의 입장에 있는 프랑스, 영국 및 미국학파가 용어의 뜻을 아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더욱 복잡해졌다.” 고 했다.<sup>17)</sup> 개념상으로 전략과 전술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한계선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마치 무지개의 일곱색깔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각각의 색깔에 대한 한계선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과 유사한 이치이다. 또한 많은 군사이론가들은 전술, 작전술 그리고 전략이 군사술을 구성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로 지상전 차원에서 분류하는 것이며 해상전에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상 연평해전의 군사술 측면은 전술과 전략부분으로 나누어서 접근해보기로 한다.

#### 1. 연평해전과 전술의 관계

戰術(Tactics)이란 싸움할 ‘戰’자와 재주라는 ‘術’자가 합쳐진 것으로서 단어 뜻 그대로는 ‘싸움하는 꾀’로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술이라는 용어는 배열에 관한 것(Matter pertaining to arrangement)이

---

17) 국대원, 『안보관계용어집』(서울 : 국대원, 1998), p. 117.

라는 뜻의 그리스인 Taktika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는 戰術이란 ‘전투에 접근하고 부대를 배치하며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고 공격 혹은 방어를 위해 이동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된 전투에서 싸우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전술은 양측이 대적 관계에서 부대를 배치하거나 기동시키고 전투시에 이들 부대를 운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술은 기교(Techniques)와 기술(Art)인 동시에 전투시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술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전투임무(적 전투력의 격파 혹은 전투에서의 승리)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연평해전에서 전술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내용은 “연평근해에서 한국 해군과 북한 해군간의 해상기동과 실제 해상 전투행위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다.

## 2. 연평해전의 전술적 내용

전술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전술적 내용만을 다루기로 한다.

- 실제적인 전투가 있기 이전에 약 9일간(6월 7일부터 15일까지) 남·북한 해군 함정들은 시위기동, 선수항로 차단과 선회 포위기동, 맞대응 충돌기동 등을 포함하여 해상에서 많은 기동과 탐색전을 실시했다.
- 연평해전에 동원된 세력들은 많이 있었으나 실제 상호 근접하여 고속기동전과 대함전투를 실시한 세력은 남·북한 수상함들이었다; 한국의 초계함 2척과 고속정 8척인데 비하여 북한은 경비정 4척과 어뢰정 3척
- 한국 해군의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으로 인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북한은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선제공격이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 실질적인 전투국면은 대함사격이었다.

- 북한 함정이 선제공격을 실시하자 한국 해군이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 전투시간은 1999년 6월 15일 09:28~09:42까지 14분이었다.
- 전투결과는 북한 어뢰정 1척 격침, 함정 5척 대파와 인명피해는 사망자 30여 명을 포함하여 약 1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낸 반면에 한국 해군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sup>18)</sup>
- 한국 해군의 반격에 큰 피해를 입고 전의를 상실한 북한 해군은 NLL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 한국 해군이 계속 추적 및 공격을 하면 북한 해군세력을 전부 격침시켜 전과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주하는 북한 해군함정을 전부 격침시킬 시 예상되는 확전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함정에게 인명구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공격은 자제하였다.

### 3. 연평해전의 전술적 내용분석

위에서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전술적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술적 목표, 사용된 방법과 수단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 가. 전술적 목표 : 북한 함정 NLL 이북으로 퇴각

처음 북한 해군 경비함정들이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NLL을 남침했을 때의 한국 해군의 전술적인 목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 경비함정을 NLL 이북으로 퇴거시키는 것이었다. NLL을 남침한 북한 함정들에게 한국 해군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NLL 북쪽으로 퇴거를 요구했으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일간이나 연속적으로 침범하였다. 따라서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이 사용되었다. 한국 해군에 의한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으로

---

18) 조선일보, 1999년 6월 17일자 6면.

상황이 불리해지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제공격을 했지만 한국 해군은 즉각 대응하여 북한 함정을 격파시켰다. 이렇게 하여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을 격파함으로써 전술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 나. 방 법

### (1) 밀어내기식 총돌기동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동의 목적은 유리한 전투태세(Fighting posture)를 획득하는 데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이며 흥미롭게 설명하기 위해 몽구스(Mongoose)와 코브라(Cobra)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몽구스는 지능이 우수하고 민첩한 행동으로 코브라를 제압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몽구스가 코브라의 머리 뒤를 공격하는 바로 그 순간 몽구스와 코브라의 생존경쟁은 끝나고 만다. 전투는 몽구스가 순간적으로 코브라 머리 뒤를 공격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가? 물론 아니다. 몽구스가 코브라와 대치하면서 유리한 위치로의 민첩한 기동이 없다면 몽구스가 공격을 가하여 코브라를 죽이게 되는 전투의 결과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투는 결과에 앞서서 일어나는 사전기동을 포함한다. 손자, 리델하트(Liddel Hart) 그리고 존 보이드(John Boyd)도 전투란 화력을 사용하는 것이상이라고 주장한다.<sup>19)</sup> 특히, 지상과는 달리 해상에서는 위치가 지리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서로 대항중인 함대나 편대 혹은 개별 함정의 위치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각 단위부대의 기동에 따라 함대의 상대적 위치는 복잡하게 변하게 된다.

해상에서 어느 한 단위부대의 사정 및 방위와 다른 부대의 사정 및 방위 사이에

---

19) Captain Wayne P. Hughes Jr. USN, Retired, Fleet Tactics : Theory and Practice(Maryland : Naval Institute Press, 1986), p. 175.

존재하는 상호관계는 중요한 전술적 고려사항이 되며, 이로 인해 양측의 동시 기동은 계속적으로 변하게 된다. 기동은 화력발사(명중)라는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민첩한 기동으로 상대보다 유리한 위치를 획득하고 또한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동으로부터 확보할 수가 있다. 이처럼 실제 전투국면에서는 유리한 전투태세(Fighting posture)는 적을 포위하여 전투 이전에 적의 사기를 마비시키는 효과는 물론 효과적인 공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 해군은 우수한 기동력을 이용하여 적의 취약부위인 함미에 충돌을 감행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을 사용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주도권 상실로 인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북한은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선제공격이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 (2) 지휘관의 상황 대처능력과 임전태세의 우수성

실제적인 전투가 있기 이전에 약 9일간 남·북한 해군함정들은 시위기동, 선수항로 차단과 선회 포위기동, 맞대응 충돌기동 등을 포함하여 해상에서 많은 기동과 탐색전을 실시했다. 훌륭한 지휘관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아의 장·단점, 전술적 유·불리를 바탕으로 한 대비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 해군과 북한 해군 지휘관들의 상황파악과 대처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며 한국 해군 지휘관들의 예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국 해군은 적의 장·단점을 심도있게 연구한 결과 '공격은 하지 않고 북한 함정을 NLL 북쪽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 해상전에서 초유의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연평균해는 다수의 함정이 고속으로 기동하기에는 협소한 공간적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어망들이 분포되어 있어 평소에도 항해하는 데 여간 조심을 하지 않으면 스크루가 어망에 걸려서 낭패를 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을 통해 한국 해군은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세가 불리함을

인식한 북한 해군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선제공격이라는 무리수를 두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연평근해처럼 악조건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적의 취약부분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평소에 많은 훈련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창의적인 사고는 평소에 임전태세 완비를 위해 많은 연구와 고심 속에서 섬광처럼 나타난 예지이며, 이것은 지휘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을 통해서 보면 한국 해군 지휘관들의 전술적 상황판단과 처리능력이 북한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수한 기동능력은 '잘하겠다'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내실있는 훈련과 철저히 대비한 임전태세의 결과이기 때문에 말이 아닌 실력으로 남·북 해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3) 전투원칙 활용 : 집중의 원칙

전투 이전에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배비하는 것은 전투원칙 중의 하나인 집중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집중은 전투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제가 중요시되는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에 전투력의 우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연평근해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용세력면에서 한국 해군보다 북한 해군이 월등하게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해군과 비교시 한국 해군은 원거리라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오는 세력 열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세력을 조정하고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렇게 하여 한국 해군은 연평근해에서 북한보다 먼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우세한 기동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게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배치하게 되었다.

적을 압박하는 속도(Speed)와 집중(Mass)의 결합체인 템포(Tempo)는 군사 행동의 속도올로서 주도권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다.<sup>20)</sup>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적·아 능력과 각종 전투상황을 기초로 하여 속도인 기동과 화력의 집중을 통해 상황을 주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직접적인 전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투현장 근처에 동원된 세력은 약 30여 척 이상이 있었으며, 서해에서 전운이 감도는 동안은 남·북한 공히 전방의 육·해·공군 세력이 거의 지원 세력으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북한의 경비정 4척과 어뢰정 3척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해군의 전력을 초계함 2척과 고속정 8척으로 구성시키는 기민함을 보임으로써 순간적으로 상대전력에서 북한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전력을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집중을 달성하여 적에게는 큰 충격을 준 반면에 우리는 경미한 피해만 입는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4)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북한의 선제공격

전투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빨리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선은 적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즉 선제공격으로 주도적 위치에 서는 것이다.<sup>21)</sup> 전술적인 측면에서 선제공격은 전투의 승리는 물론 전략적인 승리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많은 전략가들은 선제공격의 이점을 획득할 수 있는 유혹을 받았고 실제로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선제공격이 실패했을 경우는 침략자라는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함부로 선제공격을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타국을 먼저 공격하는 침략행위는 국제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국제사

20) <http://carlissle-www.army.mil/usawc/Parameters/97spring/97/kagan.htm>

21)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연구』(육군교육사령부, 1989), p. 450.

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먼저 남침을 하고서도 북침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라는 낙인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그 누명을 한국측에 뒤집어씌우려는 전형적인 북한의 수법이다. 국제법적으로 타국에 대하여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일반적으로 침략전쟁이라 한다. 이러한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자위행동을 취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국제법상 자위전쟁이라고 한다.<sup>22)</sup>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북한이 선제공격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모두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위기상황이었지만 실제전투를 수행하는 전쟁상황은 아니었다. 북한 해군은 먼저 공격을 함으로써 선제공격의 전술적인 이점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북한의 지휘부에서 공격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공격명령 하달여부”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 즉 공격명령을 하달했을 경우와 공격명령을 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공격명령을 하달했을 경우(북한의 계획된 도발)

이 경우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도발이 되며 이것은 북한 지도부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전략적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화전양면 전략의 한 단면으로서 북한의 지도부는 아직도 대남적화의 허황된 꿈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무력도발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

22) UN헌장 제51조는 ‘UN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UN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의 남·북한 및 국제적 상황을 고려시 북한은 NLL을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선제공격을 통하여 한국 해군의 격파를 시도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의도한대로 선제공격에서 성공했다라면, NLL에 대한 북한의 주장관철은 물론 당시 진행중이었던 여러 가지 회담에서 주도권 장악과 지속적인 무력사용의 위협을 통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공격명령을 하지 않았을 경우(북한의 우발적 도발)

이 경우에는 북한의 우발적 도발에 해당되지만 이것은 북한군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북한군의 명령체계와 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만약 현장지휘관이나 병사의 긴장에 의한 우발적 선제공격이었다면 이것은 북괴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이 대단히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실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명령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야 할 군이 그리고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 수 있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중요한 문제에 해당되는 선제공격에 대한 통제불능은 북한지도부는 물론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에 대한 질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5) 전투능력의 우위

연평해전에서 실시한 전투국면은 대함전 중에서 기동과 대함사격이 주를 이룬 전투였다고 볼 수 있다. 해군의 전투 특성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해군전은 일반적으로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기뢰전, 상륙전 특수전, 정보전 등으로 분류한다. 해상의 세력은 시위나 포위로는 격파되지 않으며 오직 파괴적인 공격에 의해서만 격파할 수 있는 것이다. 전투에서는 기동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전술적 목표는 명중을 통하여 적함을 격침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해상전투에서는 우세한 화력과 공격능력이 전세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적함을 격파할 수 있는 것은 우세한 전투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연평해전에서 실제 전투시간은 14분밖에 되지 않아 속전속결형의 특성을 띠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육전과 비교해 볼 때 교전을 벌이는 실제 전투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sup>23)</sup> 그 이유는 해상에는 일단 적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면 숨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해전의 주 무기는 대구경의 포, 어뢰, 기뢰, 미사일, 항공기 등과 같은 파괴력이 대단히 강하고 위력적이다. 또한 지상전에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연적인 엄폐물이 있으나 바다에서는 그러한 방호물이 없다. 오히려 군함에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빈틈없이 적재한 기름, 탄약, 발전기,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단 한방이라도 치명적인 부위에 명중을 하면 화재, 침수의 피해로 인한 침몰 가능성이 물론 자체의 파괴력 때문에 함정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전의 특성과 갈수록 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한 파괴성과 정

---

23)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전을 살펴보면, 청일전쟁시 풍도해전과 황해해전은 약 4시간 이내였다. 러일전쟁시 쓰시마(대마도)해전은 일본의 연합함대가 사격을 위한 T자 기동을 한 시각이 14시 05분이었으며 도고 제독이 전투중지를 명한 시각이 19시로 전체 전투시간은 약 5시간 정도였으며 그 이후는 전과 확대를 위한 추격전이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시의 유틀란트 해전은 영국의 대함대와 독일의 대양함대간 유일한 정면대결을 벌인 해전이었으며 약 17시간의 전투가 벌어졌다. 진주만 공격은 일본항공대 제1과의 공격이 25분간, 제2과 항공대 공격은 30분간 총 55분간이었다.(제1과 항공대의 공격이 끝나고 약 50분 후에 제2과 항공대의 공격이 시작되어 진주만 공격에 소요된 총시간은 1시간 45분임.) 미드웨이 해전도 약 3일간 지속되었으나 실제 미국 항모의 항공기에 의한 일본 항공모함 3척이(‘소오류’ 10시에 피습, ‘카가’와 ‘아까기’는 10시 24분부터 34분까지 약 10분 동안의 공습에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은 침몰됨.) 피습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확성을 고려할 때 미래의 해전은 더욱 속전속결의 양상을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6) 장비의 우수성

연평해전은 상대적으로 첨단장비를 보유한 한국 해군과 열악한 구식 장비로 무장된 북한 해군간의 전투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걸프전과 코소보사태의 주요한 전술적 교훈은 열세한 국가(이라크, 유고)의 공군력은 우세한 국가(미·영·불)의 공군력에 대항해 전투(항공전) 한번 할 수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어도 전투에 사용할 수 없는 전력임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고도로 첨단화된 불특정 위협과 대처해야 하는 21세기 한국 해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실증한 좋은 계기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선제공격을 하였지만 해상의 파도와 상대적인 기동으로 인하여 북한은 선제공격의 이점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자동화된 사격통제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해군은 북한의 선제공격을 확인한 후 사격명령에 따라 사격버튼을 누르자 북한 어뢰정에 정확히 명중되어 그대로 침몰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표적을 레이더 빔으로 적함에 일단 맞춰 놓으면 표적의 속력과 기동에 관계없이 포구는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하게 된다. 명령에 의해 발사 버튼만 누르면 자함의 이동, 기상상태, 표적의 기동 등을 컴퓨터로 계산하여 표적의 미래위치로 포탄은 날아가 표적을 격침시키는 것이 첨단 사격통제장치의 기능이다. 이러한 첨단 자동화된 장비에 대항하여 선회와 고각을 맞추기 위해서 수동으로 포구를 돌리는 구식장비는 애당초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 해군의 자동화된 고속포 앞에서 북한의 구식 수동포는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14분이라는 그야말로 “어어”하는 순간에 전투는 결판이 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번 패배하게 되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은 물론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전에서 한번 패배하게 되면 영원한 패배자가 될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 해군전력의 특성이기도 하다.

해전사를 보면 해상지휘관들은 해전이 지닌 엄청난 파괴성을 고려하여 해전에 세력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래서 지상전과 비교해 볼 때 해상에서는 대규모 해전이 드물었다. 부분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그 이유는 해상에서는 육상과 비교시 물질적 요소의 우열을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까닭에 열세한 해군지휘관들은 적이 자기의 목을 위협하기 전까지는 전투를 기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sup>24)</sup>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세한 해군은 근소한 세력의 우세만으로도 적을 억제하거나 무력화시키며 실제 해상전투를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 (7) 북한 함정의 NLL 이복으로 퇴각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 해군이 큰 피해를 입고 NLL 북쪽으로 퇴각하였다는 것은 한국 해군쪽에서 보면 전술적인 목표의 달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 해군의 군사적인 위협과 선제공격을 제압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결전을 벌임으로써 적을 격파하여 적의 의지를 굴복시킨 것이다. 연평해전 이후 북한 경비정들은 NLL 북방에서 대기하면서 NLL을 침범하지 못하고 있다. 순식간에 사라진 함정과 전우, 전우의 싸늘한 주검 그리고 전투에서 생긴 상처를 생각하면 북한 해군이 앞으로는 감히 한국 해군과 전투를 벌이려고 하지 않을

---

24) 해군전력의 단순비교는 함정의 척수, 개별함정의 크기, 속력, 무장과 방호능력 그리고 지휘통제체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른 계량적인 비교를 통하여 적·아의 우세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해군전력은 조그만 우세가 전세력의 우위를 결정할 수 있는 특성과 한번 공격을 받으면 회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열세하다고 판단되는 해군지휘관은 가능하면 결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1690년 7월 10일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함대가 비치 헤드(Beach Head) 근해에서 프랑스의 튜빌(Tourville) 함대와 벌인 해전으로서, 영국의 허버트(Herbert) 제독은 프랑스 전력과 비교시 열세임을 인식하고 결전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를 위하여 함대를 보존하는 '현존함대(Fleet in being) 전략'을 구사하였다. 결전을 회피한 이유로 허버트 제독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현존함대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무죄가 되었다.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학습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강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강자이며 힘의 세계에서는 승리가 모든 것을 대변한다.

#### 다. 수단 : 한국 해군세력 10척 대 북한 해군세력 7척

연평해전에 동원된 세력들은 많이 있었으나 실제 상호 근접하여 고속 기동전과 대함전투를 실시한 세력은 남·북한 수상함들이었다: 한국의 초계함 2척과 고속정 8척인데 비하여 북한은 경비정 4척과 어뢰정 3척이었다.

#### 4. 연평해전의 전술적 평가

한국 해군이 북한 해군을 격파한 전투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강성대국을 자랑하는 북한에는 큰 충격을 주었다. 연평해전에서의 전술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먼저 전술적인 목표인 북한 해군함정들을 NLL 이북으로 퇴각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술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북한 해군 경비함정들이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NLL을 남침했을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경비함정을 NLL 이북으로 퇴거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이 계속적으로 NLL을 침범하자 한국 해군은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으로 북한 해군 함정들을 밀어서 NLL 북쪽으로 보내려고 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북한 해군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제공격을 했지만 한국 해군은 즉각 대응함으로써 남·북한 해군간 해상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전투결과는 북한이 대패를 했는데, 북한 어뢰정 1척 격침, 함정 5척 대파와 인명피해는 사망자 30여 명을 포함하여 약 1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고 NLL 북쪽으로 퇴각하였다. 이렇게 한국 해군이 해상전투를 통해서 북한 해군을 격파함으로써 전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술적인 방법은 밀어내기식 충돌기동과 해상전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지휘관들은 여러 가지 전투의 원칙들을 적절히 적용하

였다. 여기에서 한국 해군지휘관의 상황 대처능력과 평소의 철저한 임전태세가 승리를 이끈 전인차 역할을 했다.

그리고 수단으로서는 한국 해군세력 10척 대 북한 해군세력 7척이 직접전투에 사용되었지만 평소에 임전태세를 위한 많은 교육과 훈련의 결과로 나타난 전투능력의 우위, 전투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장비의 우수성, 전투 이전에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배비하는 집중의 원칙 등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상대전력에서 북한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임전태세가 완비된 우세한 전력을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집중을 달성하여 적에게는 큰 충격을 준 반면에 우리는 경미한 피해만 입는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연평해전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전쟁의 시작과 끝이 없는 특이한 전쟁을 했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은 전쟁선포를 하지 않은 가운데 전쟁을 시작했으며 전쟁종료의 공식적인 선언도 없었다. 다만 모두가 묵인하는 가운데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패배한 북한 해군이 NLL 이북으로 퇴각함으로써 전쟁의 종료를 묵인하였다. 그리고 모두가 이것이 '남·북한간의 전쟁' 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IV. 연평해전의 전략적 평가

### 1. 연평해전과 전략의 관계

戰略이란 싸움할 '戰'자와 피라는 '略'자가 합쳐진 것으로서 단어 뜻 그대로는 '싸움하는 피' 혹은 전쟁에서 '用兵의 指揮'라는 뜻으로 장군의 용병술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전략(Stratagy)이라는 용어는 기원 전 약 50년경의 그리스의 크세노폰이 전략(Strategos), 전술(Tacticos)이라고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리스 시대의 전략(Strategos)은 지휘관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며,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의미하는 장군의 술을 의미하였다고 한다.<sup>25)</sup>

전략이라는 용어는 전쟁술에 관한 저술가와 연구가들이 많았던 18~19C에 많이 통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특정한 과업이나 임무를 성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개념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내린 전략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전략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전략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군사전략은 작전구상의 술이며, 전술은 실시의 술이다. -로오란-
- 전략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운동에 관한 기술이며, 전술은 전투에서 전투력 사용에 관한 기술이다. -클라우제비츠-
- 전략은 정책의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수단을 분배, 적용하는 기술이며, 전술은 직접 전투행위를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지휘하는 기술이다. -리델하트-
- 전략은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시위를 통하여 국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대운동의 기술과 과학이다. -미 육군-

군사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군사력의 운용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군사전략은 군가전략의 일부분이며, 군가전략을 지원해야 하고, 국가정책에 상응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부분을 세분해보면, 목적, 방법 그리고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목적은 군사목표로

---

25) 에드워드 B. 에케슨, "군사전략의 범위", 최병갑 외(공저), 『현대군사전략대강』 (서울 : 을지서적, 1987), p. 381.

표현할 수 있으며, 방법은 군대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책과 관련된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책의 모색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방책은 군사전략개념(Military concepts)으로 표현되며, 수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자원(Military resources)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군사전략은 아래와 같은 등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략<sup>26)</sup> = 목적(지향하는 목표) + 방법(전략개념, 행동방안) + 수단(도구, 자원)

위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전략적 의미는 “목표달성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행동방책”이라고 정의하면서 연평해전의 전략적 의미는 “NLL에 대한 현상유지(목표)를 위해 군사력(가용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전략개념(방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전략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단위(Analytical Unit)는 목적, 방법 그리고 수단이 될 것이다. 연평해전에서의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말한다면 전술의 범위는 시간, 공간 및 내용적으로 직접전투에 관련된 실제 전투행동이 되지만 전략은 좀더 포괄적인 전투행위 이전과 이후의 것을 포함하는 사항이면서 직접적인 군사행동(이것은 전술적인 내용에 포함)보다는 계획에 관련된 사항이 될 것이다.

## 2. 연평해전의 전략적 내용

우리가 연평해전에서 사용된 전략목표, 방법, 수단 등을 어떻게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연평해전이 전략이란 차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내용을 먼저 도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

26) 아더 라이케, “군사전략의 이해”, 이종학 편저, 『군사전략론』(서울 : 박영사, 1992), p. 102.

- 북한 해군은 어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NLL을 남침하면서 NLL을 무실화했다.
-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사격을 함으로써 해상결전을 통해 북한 해군을 NLL 이북으로 퇴각시켰다.

### 3. 연평해전의 전략적 내용분석

#### 가. 전략목표 : NLL에 대한 현상유지

북한 해군은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NLL을 9일 동안 남침하여 한국의 주권을 유린했다. 이번 북한의 NLL 침범은 단순한 NLL 월선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영해로 관리되어 온 수역을 북한의 영해라고 우기기 위한 계산된 의도에 의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일부 북한의 어선이나 북한 경비함정들이 NLL을 월선할 경우 한국 해군이 경고를 하면 곧바로 NLL 북쪽으로 복귀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던 북한이 이번에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일간이나 연속적으로 침범하였다. 심지어 한국 해군함정들에 의한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에 의하여 북한 경비정들을 북한쪽으로 밀어내도 계속해서 NLL을 침범하여 NLL을 무실화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우발적이 아닌 계획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정치·경제적으로 실리를 챙기기 위한 계산된 도발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면, 한국은 거기에 겁을 먹고 경제적으로 보상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다. 사실 한국과 미국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제조하겠다고 위협하자 북한측에 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했다. 이어 1998년에는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사건이 터져나오자 미국은 북한에 식량 60만 톤을 제공하고 지하시설 사찰권을 얻어냈다. 이처럼 북한은 문제를 만들어 겁을 주면 푸짐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이 NLL에 대한 억지주장을 통해 한국을 겁주면 북한에 푸짐한 보상을 들고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계산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하에 북한 해군은 계속적으로 NLL에 대한 무실화전략을 구사하여 NLL에 대한 현상타파를 추구한 반면 한국 해군은 NLL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국제법과 교전규칙에 의거한 제반 절차와 노력을 경주했다. 한국 해군함정들에 의한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에 전세가 불리하게 된 북한 해군함정이 선제공격을 하자 한국 해군이 대응함으로써 해상에는 남·북 해군간의 해상결전을 벌였다. 결과는 한국 해군의 압승이었고 북한은 NLL 이북으로 퇴각하였다.

연평해전에서의 한국 해군의 전략목표는 북한이 NLL을 침범하여 NLL을 무실화함에 따라 이러한 북한의 NLL 침범행위를 중지시키고 NLL에 대한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연평해전에서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응징함으로써 우리의 확고한 안보의지와 능력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북한의 NLL 침범으로 인하여 먼저 무력은 금하되, 현명하게 대처하여 북한 경비함정들을 NLL 이북으로 되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은 해군지휘관들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sup>27)</sup> 그러나 한국 해군은 완벽에 가까운 정도의 위기 처리능력을 발휘하여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하여 해상결전을 통해서 북한 해군을 격파함으로써 NLL에 대한 현상유지가 가능토록 했다.

#### 나. 전략개념(방법) : 해상결전, 강압전략

연평해전에서 사용된 방법인 전략개념을 살펴보면, 북한이 NLL을 침범하여 NLL을 무실화전략을 수행함에 따라 이러한 북한의 행위를 중지시키고

---

27) 김대중 대통령이 연평해전 당시에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은 “첫째, 북방한계선을 꼭 지킬 것, 둘째, 먼저 발포하지 말 것, 셋째, 북한이 발포하면 이를 단호히 격퇴할 것, 넷째, 그러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었다고 밝혔다. 『국방일보』, 2000년 3월 15일자, 1면.

NLL에 대한 원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국 해군은 해상결전과 강압전략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해양통제권을 확보 및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결전(Decisive Battle), 현존함대(Fleet in Being), 봉쇄(Fleet Blockade)라는 전략이 사용되어진다. 결전이란 적의 함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규모의 관계없이 항상 위협이 되므로 가용한 전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파한다는 개념이다.

결전은 일반적으로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주된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결전을 시도했던 경우는 많았으나 실제적으로 결전 그 자체는 많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는 결전을 할 경우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세한 함대가 결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의 결전보다는 계속적인 해전을 통해 누적적으로 전과를 확대하여 해양통제권을 확보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연평해전에서도 약 9일간의 대치기간이 있었지만 14분의 결전<sup>28)</sup>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연평해전의 결과도 역사적으로 치루어진 결전의 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전투의 승리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시켜 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패배한 북한 해군은 더 이상 NLL 이남에서 NLL에 대한 무실화전략을 고수하지 못하고 NLL 이북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알렉산더 조지(Alexander George)는 강압의 형태를 억제가 실패하여 타국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행위를 현상태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목표달성을 못하도록 하는 형태와 상대방이 이미 성취하여 기정 사실화한 행위를 원상태로 회복

---

28) 결전의 개념은 “가용한 전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파하기 위해 치루는 전투”이다. 따라서 결전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전환시킨 대규모의 전력이 집중된 해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연평해전에서는 실제 NLL을 침범한 북한 해군의 주력과 이에 대응한 한국 해군의 주 세력이 해전을 치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력과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연평해전이 갖는 한국적 의미의 결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9) Alexander George, *The Development of Doctrine and Strategy*, in Alexander George et al.,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Bottom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pp. 1~35.

시키도록 설득하는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sup>29)</sup> 반면에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은 억제와 강압의 차이를 도전국이 어떠한 행동을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과 도전국에게 어떠한 행동을 개시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행동의 중단을 강요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협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sup>30)</sup>

북한 해군에 의한 NLL 무실화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으로 효과를 거두고 주도권을 획득하자 북한은 상황의 불리함을 인식하고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선제공격을 했다. 이렇게 하여 연평근해에서는 해상결전(Decisive Battle)이 벌어졌고 북한 해군이 참패를 당하고 NLL 북쪽으로 퇴각당했다. 이는 북한의 침략을 한국 해군이 힘을 바탕으로 한 강압전략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9일 동안이나 NLL을 침범함으로써 북한은 NLL에 대한 무실화전략을 기정 사실화시키는 과정에 있었는데, 한국 해군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중지시키고 NLL에 대한 원상을 회복시켜야만 했다. 따라서 평화적인 방법을 거부한 북한 해군에 대해서 행동의 변화를 강요하기 위하여 한국 해군은 무력으로 북한 해군을 제압하였다. 이렇게 되자 북한 해군은 더 이상 NLL 무실화전략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결국 NLL 이북으로 퇴각당했다. 이로써 서해의 NLL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원상태로 회복되어 現狀維持(Status Quo)가 되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내용과 전략개념을 연관시켜보면, 북한이 NLL에 대한 현상타파를 목표로 NLL 무실화전략을 수행했지만 해상결전에서 한국 해군에 패함으로써 북한의 행동은 중지되고 NLL 이북으로 퇴각당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한국 해군의 강압전략은 효과를 발휘했으며 이로써 한국 해군의 전략목표인 NLL에 대한 현상유지가 달성되었다.

---

30)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 188.

#### 다. 수단 : 한국군 대 북한군

전술적 측면에서 수단을 보면, 연평해전에서 직접전투에 참가하여 교전을 벌인 세력은 한국의 초계함 2척과 고속정 8척인데 비하여 북한은 경비정 4척과 어뢰정 3척이었다. 그러나 전술적인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측면의 수단을 고려해보면, 연평해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남·북한의 육·해·공군 전세력들이 직·간접적으로 동원이 되었고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한반도에는 확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확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확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약 확전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국가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와 한·미 군사위원회 상설회의에 의거 美 增援戰力 전개를 위한 협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효과가 있었다.<sup>31)</sup>

### 4. 연평해전의 전략적 평가

#### 가. 연평해전에서 사용된 전략목표, 개념과 수단

북한 해군은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NLL을 9일 동안 남침하여 한국의 주권을 유린했다. 연평해전에서의 한국 해군의 전략목표는 북한의 NLL 침범행위를 중지시키고 NLL에 대한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연평해전에서 사용된 방법인 전략개념을 살펴보면 북한이 NLL을 침범하여 NLL을 무실화전략을 수행함에 따라 이러한 북한의 행위를 중지시키고 NLL에 대한 원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국 해군은 해상결전과 강압전략을 적용한 것으로

---

31) 연평해전이 발생하자 미 국무부는 즉각적으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미국의 핵잠수함 2척과 항모 1척을 한국 근해로 이동시켰다. 반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대북 군사지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은 채 서해의 교전이 남·북한간 더 이상의 군사충돌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만 표명했다.

볼 수 있다. 북한이 NLL에 대한 현상타파를 목표로 NLL 무실화전략은 수행했지만 해상결전에서 한국 해군에 패함으로써 북한의 의도가 무력화되어 NLL 이 북으로 퇴각함으로써 한국 해군의 강압전략은 효과를 발휘했으며 이로써 한국 해군의 전략목표인 NLL에 대한 현상유지가 달성되었다.

연평해전에서 직접전투에 참가하여 교전을 벌인 세력은 한국의 초계함 2척과 고속정 8척인데 비하여 북한은 경비정 4척과 어뢰정 3척이었다. 그러나 연평해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남·북한의 육·해군 전세력들이 직·간접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략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전력은 한국은 한·미 연합전력인 반면에 북한은 북한군 전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나. 연평해전을 통해서 나타난 기타 사항들

전략적 목표, 방어개념과 수단을 제외하고 연평해전에서 나타난 기타 사항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벼랑끝 외교와 협박을 할 수 있었던 근거인 군사력의 실체를 보임으로써 앞으로는 적어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위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더욱더 비대칭 전력을 바탕으로 비대칭 전술과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전투는 해군이 있으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육·해·공군이 효과적인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연평해전에서는 한국군이 직접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북한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확보했고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전투를 종결시켜 확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통제력을 보여준 것은 한국군의 능력이라고 평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와 함께 한·미 군사위원회 상설회의에 의거 미 증원 전력 전개를 위한 협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인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연평해전의 가장 큰 전략적 승리의 의미는 전투승리를 통해서 국민에 대한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에 한국안보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시킨 쾌거였다.

## V. 연평해전의 정치적 평가

### 1. 연평해전과 정치의 관계

역사상 수많은 전쟁은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왔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이다.”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은 전쟁을 국가정책의 도구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정책의 연장이란 의미는 전쟁을 정치의 이성적 통제에 종속시켜서 분별력을 가지고 국가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의 개념에 의하면 전쟁이란 주권국가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전쟁은 정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세계에서 나폴레옹 이래로 국가 단위의 권력정치 현실에 지나치게 민감했던 국수주의적 지도자 또는 군국주의자들은 전쟁의 자의성을 정당화하고 절대목적과 절대수단을 신봉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필요 불가결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시 군사력에 바탕을 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수행했으며, 이러한 강압외교가 효과적이지 못할 때에는 전쟁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전후관계, 전쟁이 추구하는 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규제하는 지성적인 규범의 유무에 의하여 분석되

어야 한다.<sup>32)</sup> 그러나 전쟁의 개념에는 침략적 행위와 방어적 자위행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행위를 평가할 때에도 상호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방어적 차원의 자위전쟁은 이성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자기보존을 위한 정책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위행위는 방어자의 생존문제에 한하여 정당화되며 이러한 면에서 현대적 개념의 국가이성의 안보적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연평해전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연평해전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군사적인 범위, 즉 전술·전략적 측면에 해당하는 전쟁의 수행관리보다는 국가통치차원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곧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이다.”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연평해전이 국가정책 수행의 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연평해전과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평해전의 정치적 내용

국가정책 수행수단으로서 연평해전의 정치적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평해전 전후의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남·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 가. 남·북한 관계

1994년 10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에서 미·북 기본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북한은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였지만 남북

---

32) A. C. Genova, “Can War be Rationally Justified?”, Robert Ginsberg (ed.), *The Critique of War : Contemporary Philosophical Exploration*(Chicago : Regnery, 1969), pp. 198~221.

대화는 기피하였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식량지원을 실시하면서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였으나 북한은 쌀지원 과정에서 인공기 계양사건, 판문점에서 무력시위, 동해 잠수정 침투사건 등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자 화해협력정책을 유보하고 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대북정책의 3원칙을 밝혔다. 즉,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으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향적인 대북정책노선이며 “햇볕정책”이라고 알려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햇볕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국내·외의 보수인사들은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포용정책이 너무 성급히 진행되어 한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정부가 햇볕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잠수정 침투 등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평했다.<sup>33)</sup> 그들은 북측의 상응하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원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1999년 3월에 한국은 비료 5만 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전달했고, 5월에 북경에서 있었던 남북 차관급 접촉을 통해 비료 2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평해전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태 이후인 6월 21일 북경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선비료지원 후이산가족문제 논의”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에 한국은 비료지원과 가족문제의 동시논의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북한은 연평해전을 남한측의 군사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처럼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는 부진

---

33) 안영섭, “대북정책 이대로 좋은가” 중앙일보, 1998년 12월 23일.

한데 반하여 민간단체,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비료지원사업, 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일행의 방북,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등 남·북간의 민간접촉 및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sup>34)</sup>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 '유훈통치'로 일관하다가 김정일을 1997년 10월 8일 노동당 총비서로 그 이후에는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당과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김정일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내세운 구호가 “社會主義 強盛大國建設”이었다.<sup>35)</sup> 그리고 북한은 3중고(경제난, 체제불안, 국제적 고립)와 3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한국의 정경분리 원칙을 악용하여 경제적인 실리만을 취했다. 즉, 한국정부는 타도의 대상으로 일부 민간기업과 종교인 등은 대북지원 대상으로 한총련 등 재야세력은 대남 통일전선 전술에 있어서 연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북침기도를 은폐하고 북한을 내부로부터 와해해보려는 것으로 흡수통일정책이고 반북통일정책이라고 비난하고 한국이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 정책으로 바꾸고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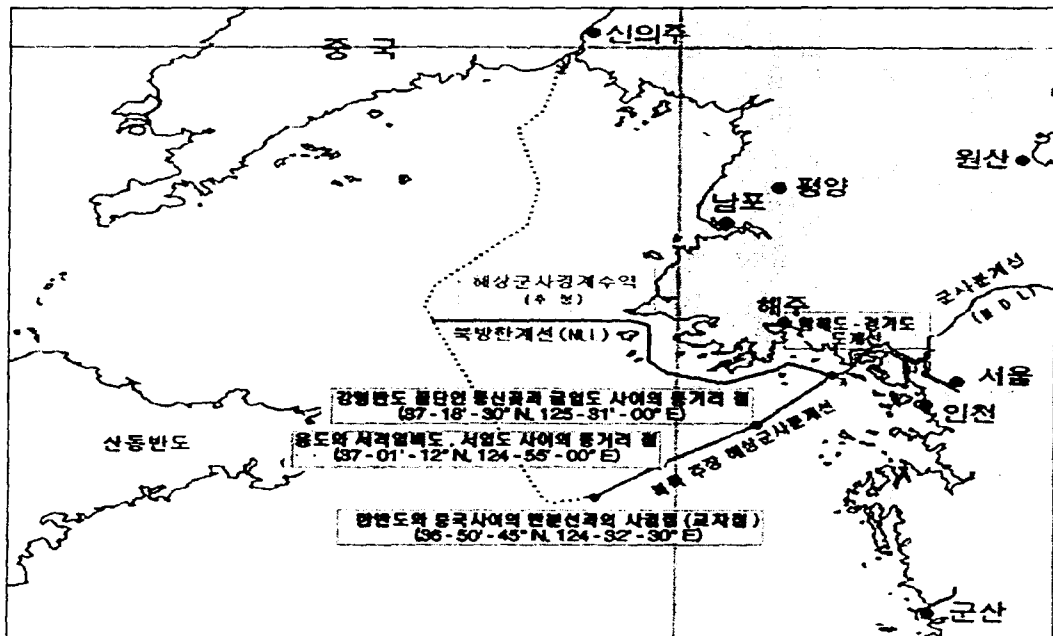
---

34)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6월 16~23일간 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고 6월 22일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 금강산 사업에 합의하였다. 11월 14일에는 북한측으로부터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약속의 담화가 발표되자 11월 15일에는 최초로 현대 금강산 유람선이 동해를 출발하여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게 되었다. 통일부, 『98 통일백서』(통일부, 1999), pp. 93~94.

35) 강성대국의 의미는 “나라는 작아도 사상과 총대가 강하면 세계적인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사상과 정체에서 대국이고 군사에서 강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세계 제일인 나라”가 된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정환, “햇볕정책과 강성대국” 국제문제 제348호(1999. 8), p. 17 참조.

연평해전이 발생한 시점(1999년 6월 15일)은 남·북한 차관급 회담이 열리기 6일 전으로 남·북한 대화국면으로 접어든 때였다. 서해에서는 남·북한 해군간에 해상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간에 동해에서는 금강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3일째 관광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서해로 비료를 싣고 북한에 도착한 대북지원 선단들은 비료를 하역중이거나 돌아오고 있었다.

연평해전 이후 남·북간의 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1999년 6월 20일, 북한은 주부 관광객 민영미(36세)를 “귀순공작활동” 혐의로 억류하였다가 6일 후에 석방했다. 관광객 억류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가 8월 5일에 재개되었다. 그리고 현대와 북한이 서해공단사업과 총 83만 달러 규모의 남북 영농사업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8월과 9월에는 평양에서 최초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와 “남북통일농구대회”가 각각 열리는 등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꾸준히 유지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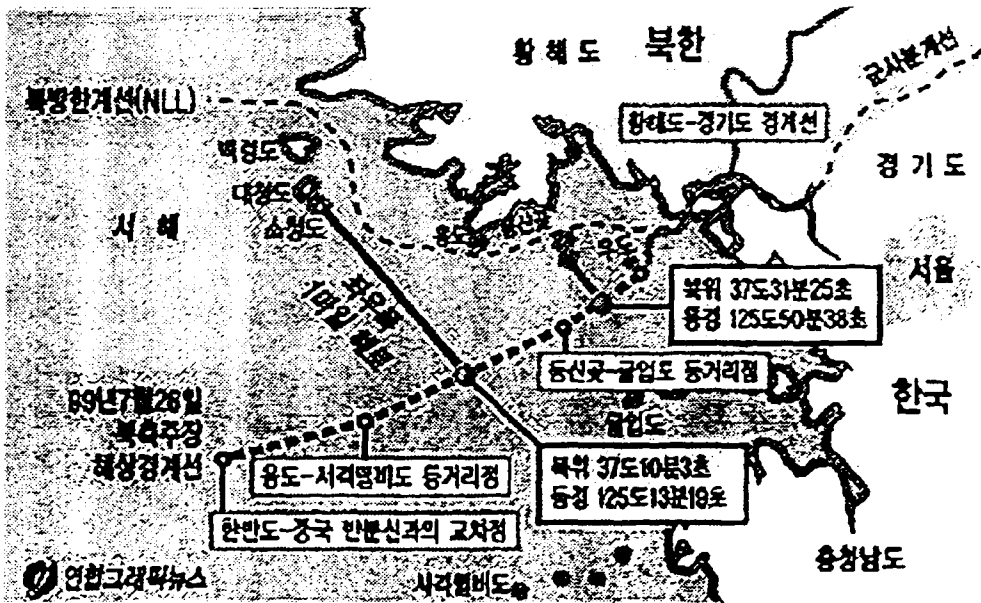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수역(추정)

한편 1999년 9월 2일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총참모부장 김영춘) 특별보도를 통해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하고 <그림 2>와 같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해 그 북쪽 지역을 인민군 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선포하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 행사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서해상에서 긴장의 수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지난 1월 21일에는 김정일이 “1년내에 당시의 패배를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전과를 올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sup>36)</sup>

또한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3월 23일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6개 항의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서해 5도 출입은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공포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이외에도 “5개 섬 통항질서”는 서해해상에서의 충돌



<그림 3>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5도 통항질서

36) 국민일보, 2000년 1월 21일자.

방지와 섬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제정된 통항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sup>37)</sup>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우리 군은 현북방한계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며 북한군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sup>38)</sup>

#### 나. 남·북한과 국제적 상황

동북아 안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혹은 주변국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최대의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세계정책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제네바 핵협정에 의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결된 상태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8월 17일 New York Times에서 북한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미간 관계가 악화되었다.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 11월부터 진행되어오던 북미협상이 북미간의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1999년 3월에 최종 타결되었다. 북한은 1999년 5월 현장조사단의 방문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60만 톤 정도의 식량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미간의 합의에 의해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금창리 지하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시설은 ‘빈 터널’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에 대한 우려는 북한이 1998년 8월

---

37) [http://pro2.yonhapnews.co.kr:88/ynaweb/printpage/news-content, asp](http://pro2.yonhapnews.co.kr:88/ynaweb/printpage/news-content.asp)

38) 국방일보, 2000년 3월 25일자 1면.

31일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이 일본은 물론 미 본토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북한의 위성발사는 대포동-1호 미사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사거리 1,5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개발중인 대포동 2호는 사거리 4,000km 이상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침체에 불구하고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왔고 이를 이라크, 시리아 등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수출함으로써 세계분쟁을 가속시키고 미국의 세계평화유지 전략에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에 이어 금창리의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대북정책의 전환에 대한 압력을 거세게 받게 되었다. 이에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하고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여 대북정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페리 대북조정관은 한반도 주변 국가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며 1999년 5월 25일~28일에는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북한의 지도자들과 미사일의 개발중단과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를 막기 위해 종래에 진행해 오던 미북간의 미사일 회담을 활성화시켰다. 최초 미북간의 미사일회담은 1996년 4월 베를린에서 시작되었고, 제2·3차 회담은 뉴욕에서 1997년 6월과 1998년 10월에 각각 실시했고 제4차 회담은 1999년 3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그후 미사일 회담은 1999년 6월 북경에서 제1차 고위급 회담으로 격상되었고, 8월에는 제네바에서 제3차 고위급 회담을 그리고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베를린에서 실시된 제3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은 위협과 설득을 통하여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를 막을 수 있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유보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적성국교역법’ 상 적성국 리스트에서 제외,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제외, 대북 금융거래 금지 해제,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대북식량지원 등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 3. 연평해전의 정치적 평가

연평해전의 정치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북한의 NLL 침범의도를 고려해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NLL 침범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북한의 선제공격은 우발적 사고인지,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한국 해군의 강경한 퇴각요구에도 불구하고 9일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이 NLL을 남침한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라기 보다는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북한의 NLL 침범의도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측면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 가. 김정일의 지시 가능성

북한의 도발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핵 위협에서 배운 교훈은 나쁘게 행동할수록 주변국들이 더 필사적으로 자신을 매수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NLL 침범과 같은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각종 대화나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시키려는 의도인 동시에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식 협상술일 가능성이 있다.

#### 나. 북한 개방에 반대하는 북한 군부의 반발 가능성

북한의 개방에 반대하는 북한 군부내의 강경세력이 남북차관급 회담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대화제의들을 실질적으로 무산시키려는 노력에서 의도적으로 무력도발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 다. 북한 내부 체제단속을 위한 긴장조성 가능성

북한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국과 접촉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하에서 북한 인민들로부터 체제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한의 위협과 호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 내부 통치차원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유도하여 북한인민들에게 대남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 때문이다.

#### 라. 한국정부의 반응과 햇볕정책의 한계시험 가능성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하여 보수인사들은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국내에서는 햇볕정책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또한 북한도 개방과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이 NLL에 대한 도발을 통하여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시킴으로써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의 구실을 제공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정부의 포용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와 한계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 마. 외화벌이를 통한 군의 충성경쟁이 사태확대 가능성

꽃게잡이는 북한에게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며 4월초부터 6월말까지 성어기의 꽃게잡이는 북한의 1년 식량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또한 북한 부대는 예산 중의 30% 정도를 자체 확보해야 하는 북한군의 독특한 군수체제 때문에 수익성이 많은 꽃게잡이에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군부가 적극 개입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의 저지가 있자 체면을 살리기 위해 밀어붙이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까지 사태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바. NLL의 분쟁수역화를 통한 미군과 협상시도 가능성

북한은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지속적으로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이 NLL을 분쟁수역화함으로써, 미군과 협상을 통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연결시켜려는 대남적화통일노선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NLL 침범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고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북한의 NLL 도발은 이러한 가능성들 중에서 하나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진 다목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연평해전 승리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여 북한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북한의 NLL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무산시킨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앞에서 고려한 북한의 NLL 침범 가능성 시나리오 여섯 가지의 의도를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의 의지를 김정일에 강요하여 김정일의 지시를 묵살시킴.

연평해전에서 북한의 패배는 김정일이 핵 위협에서 터득한 ‘나쁘게 행동할수록 주변국들이 더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학습의 효과에 썩기를 박았다고 할 수 있다. 연평해전 이후 북경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는 연평해전의 승자로서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패자로서의 처지를 인식했는지 군사적인 위협을 하지 않았다. 만약 북한이 승리를 했다면 아마도 군사적 협박과 공갈을 하면서 많은 것을 강요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북한은 자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던 미사일도 발사할 수 없었다. 미국으로부터 식량 60만 톤과 기타 사항을 얻어내었지만 더 이상 공갈과 군사적 협박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효과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북한의 태도에는 상당히 변화된 일면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은 각종 대화나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행동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국가위상에 속하며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이 된 정치력인 동시에 협상력이라 할 수 있다.

## ② 실력으로 북한 군부의 반발을 묵살시킴.

승부의 세계는 냉엄한 것이다. 특히, 전투에서 패자는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북한이 개방되면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군부는 불안을 느낄 것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에서 주도권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 군부내의 강경세력은 의도적으로 무력도발을 유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오직 믿는 것은 군사력이었는데 전투의 결과 힘의 우위는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났다. 앞으로도 북한 군부내의 강경세력이 군사적 위협에 앞장 설 수 있을 개연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연평해전에서 그들의 실상과 남·북한의 실력차를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군부의 주장과 행동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 ③ 북한 내부 체제단속을 위한 긴장 조성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해 외부로부터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반면에 김정일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통제를 통해 내부를 단속하고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긴장조성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수시로 한국을 도발함으로써 정권유지를 위한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존재감을 유지해야만 내부의 체제를 단속하고 밖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군사적 도발위협은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자양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정일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며 도발은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차후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치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해 타격을 가할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 ④ 무력도발 불응원칙을 확인시키고 일관된 햇볕정책 추진의지를 확인

연평해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가해왔다.<sup>39)</sup>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적인 도발을 자행해왔으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군사적 응징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응징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고 미국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과로 북한의 군사위협과 도발은 계속되었지만 한국은 그런 취약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연평해전 이전에는 북한이 우리의 국방력을 매우 허술하게 보았지만 막상 전투가 벌어지자 우리 장병들의 우수한 전투능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한국 해군은 북한이 것처럼 자랑하던 강성대국의 북한군을 전투 시작 14분만에 제압함으로써 북한에게는 큰 충격을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대단한 자긍심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연평해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성공적으로 응징함으로써 우리의 확고한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정책의지와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더구나 휴전 이후 북한의 수많은 무력도발이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이를 격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sup>40)</sup>

정부의 햇볕정책이 많은 비평과 질책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연평해전의 승리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국방태세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사항은 대북포용정책이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과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유화정책은 힘을 배경으로 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정책이고, 포용정책은 강력한 힘을 뒷받침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공세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포용정책은 약자는 사용할 수 없는 강자의 정책이며, 우리로서는 전쟁 억제력과 경

---

39) 이번 사태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김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인 이른바 햇볕정책도 야당의 비난대상이었다. 그들 강경파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대북식량원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뉴스위크 한글판』 1999. 6. 30. p. 20.

40) 이를 두고 한국의 역대 지도자 중 김대통령처럼 북한의 침략행위에 단호하게 맞선 사람은 없었다고 평했다.

제력, 외교력 등 북한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이란 강한 안보와 화해협력이라는 양날개를 달고 있으며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일관성있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경제교류,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나아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완벽한 국방력이며 햇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도 튼튼한 국가 안보 능력이라는 것을 연평해전의 승리가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연평해전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문민정부의 대북원칙 중의 하나인 무력도발 불용원칙을 확인시키고 일관된 햇볕정책 추진의지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연평해전은 국가정책 수행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 ⑤ 분쟁수역화를 통한 미군과 협상추진 전략의 실패

일부에서는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전술적으로 패배했으나 NLL을 “분쟁수역화” 하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승리로 보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다. 아마도 북한이 한국 해군을 제압했다면 그러한 유추가 가능하지만 북한은 패자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 해군도 북한의 NLL 침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한국 해군을 제압할 능력도 없다. 북한이 NLL에 대한 “분쟁수역화”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북한의 NLL 무실화의 의지를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강압적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강압전략에 의해 힘으로 NLL에 대한 원상을 회복하여 현상을 유지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NLL 협상 제안에 대하여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NLL에 대한 분쟁수역화를 미끼로 미국에 대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은 이제 그 명분과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낸 연평해전 승리의 결과이다.

## VI. 결 론

역사적으로 군사력의 역할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군사력은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과 함께 평시에는 대외정책의 수단으로서 정치·외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군사행동은 상대국에게 자국의 분명한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연평해전을 통해 한국 해군이 북한 해군을 격파한 전투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강성대국을 자랑하는 북한에는 큰 충격을 주었다. 전투결과는 전술적으로는 전투당사자들의 전투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연평해전에서의 전술적 내용을 요약하면,

북한 해군 경비함정들이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NLL을 남침했을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경비함정을 NLL 이북으로 퇴거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은 계속적으로 NLL을 침범하자 한국 해군은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으로 북한 해군 함정들을 밀어서 NLL 북쪽으로 보내려고 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북한 해군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제공격을 했지만 한국 해군은 즉각 대응함으로써 남·북한 해군간 해상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해상전투를 통해서 한국 해군이 북한 해군을 격파함으로써 전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적용된 전술은 밀어내기식 충돌기동과 대함사격이 주가 된 해상결전이었다.

전술적인 수단은 연평해전에서 직접전투에 참가하여 교전을 벌인 세력은 한국이 10척, 북한은 7척이었다. 그러나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물리적인 전력의 합계가 아니라 훌륭한 지휘관,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우수한 전투력 그리고 우수한 장비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전술적 방법에 해당되는 한국 해군의 밀어내기식 충돌기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단한 훈련과 연습 그리고 그 동안 땀흘리며 준비해온 임전태세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평소의 교육훈련과 완벽한 임전태세를 바탕으로 한국 해군 지휘관들은 상황에 적합한 여러 가지 전투의 원칙들을 적절히 적용하여 완벽에 가까운 전술적인 승리를 달성하여 전술적인 승리를 전략적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전략적인 측면을 요약하면 북한 해군은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NLL을 9일 동안 남침하여 NLL에 대한 무실화전략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의 전략목표는 북한의 NLL 침범행위를 중지시키고 NLL에 대한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연평해전에서 사용된 방법인 전략개념은 북한의 NLL 무실화전략을 중지시키고 NLL에 대한 원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국 해군은 해상결전과 강압전략을 적용했다. 북한이 NLL에 대한 현상타파를 목표로 NLL 무실화전략을 수행했지만 해상결전에서 한국 해군에 패함으로써 북한의 의도가 무력화되어 NLL 이북으로 퇴각함으로써 한국 해군의 강압전략은 효과를 발휘했으며 이로써 한국 해군의 전략목표인 NLL에 대한 현상유지가 달성되었다. 연평해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남·북한의 육·해·공군 전세력들이 직·간접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략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전략적 수단은 남·북한의 전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연평해전에서 나타난 기타 사항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벼랑끝 외교와 협박을 할 수 있었던 근거인 군사력의 실체를 보임으로써 앞으로는 적어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위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군이 직접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북한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한국군 단독의 작전통제능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국가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와 함께 한·미 군사위원회 상설회의에 의거 미 증원전력 전개를 위한 협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전략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인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한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연평해전의 가장 큰 전략적 의미는 전투승리를 통해서 국민에 대한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내·외에 한국안보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켰다. 이렇게 한 결과 연평해전의 승리는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시킨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평해전의 정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연평해전의 승리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여 북한의 의지를 굴복시킨 점이다. 연평해전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문민정부의 대북원칙 중의 하나인 무력도발 불용원칙을 확인시키고 일관된 햇볕정책 추진의지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연평해전은 국가정책 수행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연평해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가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을 성공적으로 응징함으로써 우리의 확고한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정책의지와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더구나 휴전 이후 북한의 수많은 무력도발<sup>41)</sup>이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이를 격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처럼 연평해전은 한국 내부로부터는 국가정책인 포용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제고시켰으며 북한으로부터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이란 강한 안보와 화해협력이란 양날개를 달고 있으며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한 응징할 수 있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일관성있는 대북포

---

41) 북한의 무력도발을 나열해보면 청와대 기습미수('68. 1. 21), 푸에블로호 나포('68. 1. 23), 울진·삼척 무장공비 도발('68. 10. 30), 판문점 도끼만행('76. 8. 18), 아웅산묘소 폭발('83. 10. 9), KAL기 폭파사건('87. 11. 29), 수많은 간첩남파와 2회에 걸친 잠수정 침투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무력도발을 일삼았다.

용정책을 추진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경제교류,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나아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완벽한 국방력이며 햇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도 튼튼한 국가 안보능력이라는 것을 연평해전의 승리가 입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한국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반면에 북한은 남북경쟁에서 불리한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상타파를 통해서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보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북한과 비교시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전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남·북한간의 국력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의 유리한 현상을 유지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현상이 타파되어 통일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통한 현상타파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북한에게 불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핵개발, 미사일 발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주한미군 철수), NLL 무실화 등과 같이 북한의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현상을 타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체제를 유지하려는, 즉 현상타파를 통한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상호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인다.

남·북간의 상호 모순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세계의 혼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오가는데 서해에서는 남·북한 해군간에 전투를 벌였다. 한반도 한쪽의 바다는 “평화의 바다”인데 반대쪽 바다에서는 “전쟁의 바다”가 되어 있다. 이것은 남·북한 정책의 상호 모순성에 의해서 나타난 극단적인 현상의 한 단면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실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평화의 바다'와 '전쟁의 바다'가 병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앞으로 커다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을 것임을 예상해 준다. 그러나 포용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남북대화에 지나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며 우리 군은 항상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단속하고 충성심을 유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긴장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의 개연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정치의 도구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군사전략과 정치의 상호관계를 결정하며 전자를 후자에 완전히 종속시키게 된다.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일 때는 전쟁은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제한적 성격일 수밖에 없다. 전쟁의 정치적 목적도 NLL 사수라는 제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국지적인 단기전인 동시에 제한전쟁이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적인 성격에 따르면 이번 연평해전은 NLL 사수라는 제한적인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이 정치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번 연평해전이 제한된 국지전으로 통제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한 지휘관의 확전방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에도 미사일을 탑재한 오사·코마급 함정, 잠수함, 육상에 설치된 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등이 있었지만 이러한 전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확전을 자제했다고 볼 수 있다.<sup>42)</sup> 그러나 북한은 확전으로 비화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불리해졌을 것

---

42) 북한도 “이번에 전면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군대의 자제력과 인내성의 결과이다.”라는 내용의 조평통 성명을 발표했다. 보다 자세한 조평통 성명(요약) 내용은 조선일보, 1999년 6월 17일자 5면 참조.

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참담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확전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sup>43)</sup>

이처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의 북한이 확전을 방지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자제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와 북한간의 확전방지 노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지휘관들은 연평해전에의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전을 방지하고 부하의 희생없이 적절한 승리만을 확보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평해전의 전술적인 승리를 정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한국 해군지휘관들의 리더십은 정말 훌륭하였으며 연평해전의 승리와 함께 길이 빛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능력, 절제되고 통제된 이성 그리고 부하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지휘관으로서의 혜안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연평해전 승리가 남·북간 전력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으로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재래식무기는 물론

---

43) 북한이 연평해전에서 확전을 자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필자는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북한은 연평해전이 있기 이전부터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미국으로부터 국제법을 준수치 않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불량아 국가(Rogue State)로 분류되어 있었다.

둘째, 북한은 NLL을 무력으로 침범하여 이번에도 북한의 부당한 행동이 언론을 통해 전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남·북한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팽팽한 긴장이 지속되자 전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다시 집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NLL을 무력도발한 북한이 선제공격까지 함으로써 전세계로부터 여론의 지지를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가운데 북한은 선제공격을 실시했지만 전투시작 14분만에 우리 해군에게 참패를 당했다. 따라서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불리해짐을 깨닫게 되어 전투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 만약 전투를 더 지속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더 참담한 결과를 맛보았을 것이며, 확전의 종착역은 김정일 체제의 운명으로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

화생방, 미사일, 핵과 같은 대량살상 무기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은 그들의 존립유지를 목표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력적 화통일을 목표로 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NLL의 무실화', 'NLL 무효화' 나아가 '서해 5도 통항질서 공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NLL에 대한 의제화를 추구할 것이며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서해의 NLL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키고 위기관리체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1. 서 적

- 유병화, 『동북아지역과 해양법』, 서울 : 진성사, 1991.
- 해군본부, 『일본, 영국 해군사 연구』, 대전 : 해군본부, 1997.
- Freedman Lawrence, *War*,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Glossop, Ronald J, *Confronting War*, 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1994.
- Small, Melvin and J. David Singer, *International War*, California : Brooks/Cole Publishing Co., 1985.
- Wright, Quincy. *A Study of War*,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1951.
- Geroge, Alexander,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Bottom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 Schelling, Thomas. *The Strategy of Conflic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Captain Hughes Jr, Wayne P, USN, *Fleet Tactics : Theory and Practice*, Maryland : Naval Institute Press, 1986.
-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 연구』, 육군교육사령부, 1989.

## 2. 논 문

- 이기택,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환경과 해양에서의 안보”, 『Strategy 21』, 창간호(1998).
-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서해 5도의 법적 지위”, 1988.
- 에드워드 B. 애케슨, “군사전략의 범위”, 최병갑 외(공저) 『현대군사전략대강』, 서울 : 을지서적, 1987.
- 아더 라이케, “군사전략의 이해”, 이종학(편), 『군사전략론』, 서울 : 박영사, 1992.
- A. C Genova, “Can War be Rationally Justified?”, Robert Ginsberg(ed.), *The Critique of War : Contemporary Phylosophical Exploration*, Chicago : Regnery, 1969.
- 전정환, “햇볕정책과 강성대국”, 국제문제, 제348호(1999. 8).

## 3. 기 타

- 국대원, 안보관계용어집, 1998.
- 양주동, 『새국어대사전』, 서울 : 한진출판사, 1980.
- 육관수, 『군사학대사전』, 서울 : 세문사, 1964.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1998.

- 월간조선 1999년 7월호.
- 조선·중앙·경향일보 1999년 6월 6일 ~ 6월 20일자.
- 해군본부, 『해양전략』 제104호(1999).
- <http://carlissle-www.army.mil/usawc/Parameters/97spring/97/kagan.htm>
- <http://pro2.yonhapnews.co.kr:88/ynaweb/printpage/news-content.asp>
- 국방일보 2000년 3월 15일, 25일.
- 국민일보 2000년 3월 25일
- 통일부, '98 통일백서, 서울 : 통일부, 1999.
- *Economist*, July 10, 1999.
- 뉴스위크 한글판, 1999. 6. 30.